

43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기억작업(memory work)으로서 민주화 관련 기념시설 조성의 의미와 과제: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섭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강사,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기억작업(memory work)으로서 민주화 관련 기념시설 조성의 의미와 과제: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섭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강사,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01

들어가며

1987년 이후 민주화의 도정에서 많은 지역에서 국가폭력과 민주화 관련 사건을 기념하는 활동과 기억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활성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5·18 해결의 5원칙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보상, 명예회복, 기념사업은 하나의 모델이자 행정적 선례가 되고 있다. 5원칙은 문제해결의 프로세스이자 사건을 규정짓는 틀이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기념사업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추모시설과 기념관의 건립은 기억작업 memory work의 과정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다. 따라서 기념시설의 구상과 건립은 사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단한 재생산, 기억의 전달과 변용, 기념과 기억의 주체 구성을 포함하는 질문과 과제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5·18 관련 기념시설의 완결로 간주할 수 있는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민주화 관련 역사기념시설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요구하는 농성은 2016년 9월 7일 시작된 후 1,096일 만인 2019년 9월 7일 종료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복원추진단을 구성하고 9월 10일에 출범함에 따라 ‘옛전남도청보존범시도민대책위’(이하 대책위)¹⁾는 대정부 투쟁에서 감시와 협력으로 농성의 성격을 전환하기로 했다. 5·18항쟁을 상징하는 옛 전남도청의 훼손과 문체부의 일방통행에 항의하며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농성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이라는 주장으로 확장되었다. 2017년 8월 28일 문체부 장관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약속함에 따라 「옛 전남도청 등 복원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었다(2018년 8월 17일~2019년 2월 12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체부는 2019년 3월 28일에 복원계획에 대한 대 국민 설명회를 거친 후 복원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용역 제안 공모를 진행하여 9월 8일 아이에스피 건축사무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건물 정밀 안전 진단, 설계,

1) 2016년 9월 30일 출범한 대책위는 광주광역시,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광주시민협, 광주시민총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광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재야단체, 학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학생회, 정당(녹색당, 국민의당, 노동당, 더불어민주당, 민중연합당, 정의당, 광주시당) 등 38개 단체가 참여했다. 출범 당시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이철우 민주주의광주행동 공동대표가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구조 검토,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건축 인허가 등을 진행하고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를 제작·설치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복원공사는 설계용역이 끝나는 2020년 하반기부터는 시공사와 전시콘텐츠 제작·설치업체를 선정해 2021년부터 2022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3년에 걸친 장기간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국민적 이슈로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은 아니었다. 복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떠나서 5·18과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 중 일부는 복원의 의미와 가치, 방법과 내용에 대해 풍부하고 다양한 논의와 목소리가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의 복원 논의가 매우 협소한 틀에 갇혀 있고, 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는 몇몇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은 단체 내부에서 복원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와 회원들과 소통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부문별 대표단체들과 공공기관인 광주광역시,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이 참여한 대책위의 구성과 대책위 주도의 정부 기관의 점거와 농성은 상당히 이례적임에도 이 또한 언론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검토된 적이 없다.

복원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은 복원협의회(대책위의 대표자, 광주시 관계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관계자로 구성)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대책위와 5·18 피해당사자 중심의 농성장 참여자들은 청와대 항의 농성 및 식발 투쟁, 시장 및 장관과의 면담, 총리의 농성장 직접 방문 시 면담²⁾을 통해 조속한 복원 추진을 요구해왔다. 시민과 국민과의 대화나 소통이 아니라 정부만을 대화 상대로 삼은 복원 논의는 점차 정부 기구와 농성장 사이의 틀에 갇히게 되었다. 복원과 관련된 중요 사안들을 소수가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시민 대부분은 관심을 두기 힘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농성 당사자와 정부와 문체부의 고위 관료, 시청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복원이라는 결론이 일찌감치 내려지고, 형태는 ‘원형’의 복원이며, 복원의 시점이 ‘80년 항쟁 당시’로 굳어져 버린 논의 구조에 다양하고 풍성한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힘들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조성 지원포럼>이 발표한 ‘민주평화교류원,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모습으로 건물 내부와 외부를 원형 복원해 5·18 사적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이 47.8%, “현재까지 준비한 것처럼 5·18 민주평화기념관 등을 갖춘 민주평화교류원을 개관하고 건물 외형을 중심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30.6%,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 이낙연 총리는 2018년 9월 8일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복원에 속도를 내고 실천하겠다고 발언했다. 총리의 농성장 방문과 약속에 대해 <연합뉴스>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해결에 큰 방향을 잡았으니, 이제부터 속도를 내 내실을 채우고 실천하는 단계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찾아 오월어머니들과 만나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도청 복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어머님들도 대체로 수용하시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어머님들 의견 충분히 고려해서 의견을 내면 정부도 충분히 존중해서 함께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라고 보도했다 (2018년 9월 8일 자 기사 「이 총리 “옛 전남도청 복원, 속도 내겠다”」 기사 참조).

21.6%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복원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이후 현재까지 복원과 관련된 논의와 토의의 장은 거의 열리지 않았고 시민이나 전문가 대상 인식 조사나 설문조사도 시행된 바가 없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가 밝히고 있듯 “1980년 5·18 시점부터 2019년까지 39년이 흐른 현재,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형에 대한 고증과 검증의 문제와 더불어 그 의미와 가치, 복원의 방법과 전시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그뿐만 아니라 복원에는 막대한 공사비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광주 사람들에게 옛 전남도청과 그 복원은 고민과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복원이 이미 결정되었고 복원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복원과 관련된 무관심과 침묵은 5·18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광주혁신시민대토론회>(2017.09.13)에서는 5·18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소통과 운영의 문제³⁾가 제기되었다. 즉 복원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원에 대해 5월 단체와 농성장과 다른 의견과 주장을 반대 의견으로 간주하고 억압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항쟁의 상징으로서 옛 전남도청 복원이 피해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다. 옛 전남도청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은 구체적 일상과 5·18과의 거리,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구별에 따른 기념 주체의 제한, 해마다 되풀이되는 의례화된 5·18의 진부함과 관련이 있다.

5·18과 기념 활동과 관련된 논의에서 민주적 토의와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은 ‘당사자 중심주의’와 관련이 있다.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주의의 극복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왔다. 정근식(1997)은 5월 정신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지역적 고립과 국민적 무관심을 극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심이나 지역 중심의 한계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정호기, 20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은우근, 2007). 왜냐하면, 당사자 중심, 지역 중심의 기념사업은 생명력이 약하며 그 효과 역시 축소되기 마련이고 시대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념행위는 지속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5·18 기념재단, 2008:339).

3) 사례로 제시된 것은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시민 공청회’(2017.6.13)에서 복원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발언자에게 야유와 욕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 토론회’(2017.6.29)에서 특정인의 발표를 막아선 일부 5월 관련자들의 행동이었다.

02

보존과 복원의 딜레마

5·18이 공적 토론과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자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더디게 만드는 당사자주의는 그동안 문제로서 제기되었지만, 학문적 논의나 공적 토의의 대상은 아니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요구하는 장기간의 농성이 던지는 질문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국가폭력 관련 기념사업에서 당사자는 누구이고, 그러한 공적 기념사업과 기념시설의 건립에서 피해당사자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당사자는 5·18의 피해당사자, 즉 사망자, 유공자, 부상자, 구속자와 그 가족을 일컫는 말이지만 이러한 규정에서 국가폭력을 행사한 가해 당사자는 가려져 있으며(사토 유기에 2018 : 37-40),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당사자를 규정하는지도 불분명하다. 현재 당사자에 대한 공식적 규정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국가의 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비당사자를 구별하는 것은 많은 시민이 참여했던 5·18의 의미와 가치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을 5·18로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국가에 의한 5·18의 공식화와 법제화는 5·18에 대해 발언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법이 규정하는 유공자와 관련자에 한정시킨다. 농성의 시작에서 복원추진단의 구성과 농성 종료에 이르기까지 옛 전남도청의 복원 과정은 제한적이고 배제성을 띤 당사자성이 강화되고 '5·18 관련자와 당사자'가 장기투쟁을 통해 기념행위의 핵심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재까지의 복원 논의, 복원계획 수립은 법정 당사자 주도의 5·18 기억의 기념비화와 성역화가 강화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김욱(2015)은 호남 정치를 평가하면서 '5·18의 신성화', '신화화된 광주정신'은 세속적 욕망을 거세하고 평범한 광주시민을 억누르고 있다고(102-107) 주장한다. 하지만 김욱의 논의는 '신성 광주'가 그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김정환(2012)은 5·18 광주항쟁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기억은 몇 옛날 의로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대에 불의와 맞서 싸웠던 '옛날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5·18을 과도하게 신화화함으로써 그로부터 현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정치를 사유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한다(105-106). 현재 5월 단체와 농성장 주도의 옛 전남도청 복원과 기념관 건립은 의도치 않게 비당사자들을 5·18과 도청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원형복원을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그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해당사자들은 비당사자, 비경험자에게도 5·18정신의

계승을 바라고 도청을 항쟁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한다.

당사자들에 의한 5·18 기억의 기념비화는 기억의 현재화와 활성화에 힘쓰기보다 시간을 거슬러 '80년 항쟁 당시'라는 과거의 시점으로의 회귀 경향을 보인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소수와 간접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방조해왔던 지난 정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중심성은 강화되었다. 당사자들에게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는 요원해 보인다. 해가 거듭됨에 따라 항쟁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정신의 계승 또한 불분명하다는 상황 인식은 5·18과 자신들이 잊히는 것에 대해서 점점 두려움과 불안감을 만든다. 농성장에서 5·18 관련자들은 5·18의 진상이 규명되고 왜곡과 폄훼 없이 널리 계승되기를 염원한다고 발언한다. 그래야 자신들의 한 恨도 풀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계승에 대한 불안함과 망각에 대한 두려움은 기념비를 통한 기억의 강화로서, 불멸의 기념물로서 옛 전남도청의 복원과 보존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 같다. 옛 전남도청은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으로 80년 당시의 기억을 소환하겠지만 비당사자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훼손된 도청과 복원된 도청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하며 그러한 차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농성장과 당사자들의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80년 항쟁 당시'로의 복원 주장은 다른 지역의 국가폭력 피해당사자들이 언급하는 사건과 피해-가해의 현장 및 건물의 보존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사건과 피해 현장의 보존은 비당사자 및 방문객의 이해와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활용과 변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 현재 옛 전남도청의 복원계획은 향후 전시관과 기념관으로 활용을 전제하면서도 원형복원 혹은 '80년 항쟁 당시'로의 복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순일 수밖에 없다. 대책위와 당사자들이 주장하듯이 '옛 전남도청을 80년 5월 당시 그대로 복원,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6개 건물(옛 전남도청, 도청회의실, 옛 전남경찰청, 경찰청 민원, 상무대, 분수대) 전체는 항쟁 유산이자 기념물로서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대책위는 '옛 전남도청이 보존되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다시 지켜가야 할 문화유산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 문화유산으로서 옛 전남도청은 기념관으로써 이용과 활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념관으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복원된 건물 내부에 다양한 전시 관련 설치물과 편의 시설들이 배치되어 원형을 훼손시키거나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홀로코스트를 증언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전쟁과 원자폭탄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히로시마 원폭 돔과 같이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중요한 사건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 원폭 돔은 파괴된 모습대로 보존되어 활용되지 않으며, 원폭 관련 기념관, 추모관, 기념비들은 강 건너편의 평화공원에 들어서 있다. 옛 전남도청을 항쟁의 원형으로써 복원된다면 보존의 논리와 주장에 따라 관련 기념관 혹은 전시관은 복원된 6개 동 이외의 다른 장소에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복원된 6개 동을 다시 기념관과 전시관으로 조성한다면 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기념관의 방문객이다. 기념관은 관람을 고려한 장치들을 구축해야 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보장하는 공간과 화장실, 승강기와 같은 설비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복원과 보존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공간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도청 내 사무공간으로 쓰였던 좁게 구획되고 분리된 내부공간들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5·18 기록관(구 가톨릭 센터)의 외부는 80년 항쟁 당시의 모습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부는 전시를 위해 사무공간의 벽들은 철거되고 전시물 설치를 위한 임시 벽이 세워져서 이전의 모습을 짐작하거나 찾아보기 어렵다. 200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5·18 보존 건물 활용방안」 연구 또한 공간의 원형을 역사성이 발생했던 시점 상태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후속세대들에게 그 기억의 보전을 담보해주는 일이지만 “5·18 보존 공간’ 내에 있는 핵심 6개 시설은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거나 항쟁 당시와 달리 변형되어 있어 그 기억의 온전함을 이미 상실했거나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51~52쪽)이라고 기술하면서 원형보존의 불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항쟁 유산으로서 도청을 원형으로 복원하고 다시 그 내부에 전시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과업이다. 역사적 현장의 보존 공간, 즉 원형으로 복원된 공간에서 공간의 구조적 변형이나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기념관의 설치와 관련 전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일부 당사자들의 바람처럼 만약 복원된 건물 안에 피해자를 기리는 조각상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혹은 영정 사진을 모신다면 6개 동의 건물 전체는 오월 영령을 기리는 거대한 위령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03

사실의 재현을 통한 기념시설의
구성과 망각

2013년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는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의 기본방향은 사실적 재현과 데이터 중심의 기존 전시의 한계를 “재현하면 제한된다”, “다 보여주면 썰렁해진다, 징그라 분다[징그러워진다]”(28)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전시의 목표를 “의미·기념을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역사에 접속하고 방문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속에 무언가를 새기게 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5·18을 잘 모르는 방문자들의 이해와 공감은 사실 재현적 전시가 아니라 예술적 콘텐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전시 목표는 5·18의 위협요인 중 하나로 제시된 “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5·18에 대한] 피로감, 지역 외부에 존재하는 거부적 정서, 젊은 세대들이 보이는 망각과 왜곡 등 광주를 둘러싼 심리적 노이즈들”(18)을 소거해야 한다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200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5·18 보존 건물 활용방안」 연구에서도 보존 공간이 5·18이 던져주는 수많은 진실성과 가치들을 기억해야 하며, 세대를 넘어 기억의 선 線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공간이지만 기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현장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물리적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의 동기 지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의 재현에 기초하여 5·18을 전시하고 기념하는 시설들은 적지 않다. 5·18 국립묘지의 추모관, 5·18 기록관의 전시, 5·18 교육관의 소규모 전시와 5·18 자유공원의 상무대 영창의 재현 시설, 전남대학교 5·18 기념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재현적 전시는 그 자체로 방문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통한 기억과 정신의 전승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특히 5·18 자유공원은 “항쟁 당시 시민군들이 잡혀 들어가 온갖 고문과 인간 이하의 폭력이 자행되었던 법정·영창이 있었던 공간이지만, 현재 그 현장은 아무런 내·외형적 콘텐츠를 갖지 못한 채 방문자가 시각적 확인 정도에 머물게 하고 그 이상의 어떤 경험도 없는 상태로 방치된 형편”(5·18 기념재단, 2008 : 51)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옛 전남도청을 비롯한 6개 건물의 활용과 관련된 보고서 중 어떤 것도 기념관과 전시의 콘셉트와 관련하여 ‘5·18 당시 상황의 사실적 재현’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2011년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시범사업」의 하나로 실시한 시민토론회(2011년 7월 15일) 결과를 살펴보면 20인의 참여자가 ‘문화예술로 승화’ 67%,

‘지역 활성화·문화산업 연계’ 20%, ‘시민 공간 조성’ 13%로 응답했으나 토론회에 참석한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대다수는 5·18 당시 상황의 재현을 요구했다. 당사자들이 5·18 항쟁의 사실적 재현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아픔이 아로새겨진 곳이고, 가족과 형제자매가 죽음을 맞이한 곳이 흔적없이 지워지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문가들이 기념관의 방향성에서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사실적 재현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방문객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려, 예술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한 방문객과 공감과 공유의 필요성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가 지적하듯 기념관에서 전시는 과거 사실의 재구성이며 사회문화적 인공물이다. 당시 항쟁(혹은 원형)에 가장 가깝게 재현하는 문제도 결국은 일종의 허구 fiction이며, 서사적 장치나 전시라는 매개 없이 항쟁 흔적의 보존과 자료의 배열만으로 기념관은 작동하지 않는다. 방문객들의 시각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짜인 동선, 이해와 공감을 돕는 다양한 재현물로 구성되는 전시보다 사실의 재현은 상대적으로 더 쉬운 과업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고증이나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원을 통한 유산의 보존과 사실 재현적 기념관의 공간들을 과거의 모습과 유사한 것들로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사실의 확인과 증언을 토대로 과거와 가능한 한 유사하게,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옛 모습으로의 복원, 즉 사실적 재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폭력과 학살의 현장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이다. 만약 옛 전남도청의 일부 공간을 최후 항전의 시점으로 재현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등장하는 항쟁과 폭력의 장면을 묘사해야 한다.⁴⁾ 그리고 기념관의 특정 공간의 사실과 가까운 복원은 주제와 메시지의 측면에서든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구성이든 하나의 장소에 다수의 사건과 기억들을 재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와 마주하게 된다. 옛 전남도청 회의실은 최후 항쟁 당시에 윤상원 열사가 죽음을 맞이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회의실로도 사용되었고 식당처럼 이용되기도 했다. 항쟁과 관련된 공간을 이전 모습대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재현 시점의 확정, 항쟁에서 그 공간이 갖는 중요성에 관한 판단, 전체 기념관 전시의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5·18과 옛 전남도청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관된 구성이 없다면 각각의 공간들은 분리되어 흩어져 버릴 것이다.

항쟁의 피해자들,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항쟁의 10일간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5·18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그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쉽지 않듯이 5·18의 경험과 기억에 부착된 우울함은 기념시설의 건립을 통해 애도로 쉽게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옛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최후

4) 학살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체험케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포의 체험일 수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들의 체험교육을 담당했던 한 교육자는 공수부대와 계엄군의 폭력을 재현한 애니메이션을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공포에 떨고 탁자 밑으로 숨는 아이도 있었다고 말한다. 5·18의 재현에서 공수부대와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 중의 하나이다. 5·18 당시 대한민국의 군인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것은 일그러지고 짓이겨진 사망자의 얼굴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5·18을 보여주는 참혹한 사진들 없이 5·18을 재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 해도 전시에 사용하기도 쉽지 않다.

항쟁을 고정된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공감을 통한 이해 및 기억의 전승이라는 복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래로 흐르는 5·18의 시간을 과거에 붙들어 매 고착시킬 수 있을까? 당사자들은 도청을 있는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쇠퇴하는 기억, 기억 계승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싶어서 하는 듯하다. 더군다나 장기간 농성을 통해 대책위와 농성장의 당사자들은 옛 전남도청의 기념관화와 관련된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많은 고민과 논의들을 모두 망각해버린 것 같다.

04

나가며

복원과 관련하여 다른 목소리 중 하나는 항쟁의 현장이 훼손될 때 지키지 못했다는 잘못과 책임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훼손 과정과 실수 또한 5·18의 일부라는 생각이다. “유지하지 못하고 흘러간 시간 또한 역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박물관에 보존, 철거의 논쟁 과정을 전시함으로써 역사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적은 한 학생의 글⁵⁾이나, “엘리베이터를 지으면서 〈옛 전남도청〉 상황실이 일부가 훼손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나 오류 또한 역사이고 이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과연 원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부서지고 훼손된 것도 역사고, 그러한 흔적들을 보면서 원형을 지키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한다.”는 한 시민의 발언⁶⁾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들이야말로 옛 전남도청을 관련된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다음 세대의 질문에 노출하고 공동의 책임으로 확산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복원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복원해서 5·18에 대한 이해를 돕고 5·18의 의미와 가치를 부단하게 학습하는 장으로서 쓰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현장을 고스란히 보존한다고 해서 교육과 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현장의 보존과 복원의 문제와 5·18정신의 계승과 기억의 전승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제임스 영(1993)은 아우슈비츠의 폐허와 관련 기념비들의 설립 과정을 검토하면서 시대가 변하고 방문객이 달라짐에 따라 기념비와 그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영은 기념관은 가장 현명한 진로는 “기념관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에 대한 수용력을 늘리는 것, 우리의 현재와 맞닿아 있는 현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 다음 세대에 생성될 새로운 의미를 위한 여지를 두는 것”(154)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한 시민단체의 도청 복원 관련 간담회(2017년 9월 12일)에 참석한 한 시민은 복원이 복원과 기억이 제한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상기시킨다. “복원을 피해당사자만의 문제로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형보존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18 국립묘지가 주는 불편함은 의인과 영웅만을 부각하고 기억하려 합니다. 수없이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라는 말처럼 5·18을 기억한다는 것은

5) 인용문은 2018년 2학기 필자가 담당한 대학 강의에서 제출된 옛 전남도청 복원 관련 글들에 대한 감상문 중 일부를 옮겨왔다.

6) 이 발언은 2017년 9월 12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도청 복원 관련 간담회 참가자의 말을 옮겨온 것이다.

당사자들의 몫일 뿐만 아니라 기억할 사람들, 다음 세대의 몫이기도 하다.

시민 대다수의 무관심 속에서 항쟁 당시의 도청으로 복원, 사실적 재현에 근거해 기념공간이 조성된다면 그러한 기념공간에 대해 비당사자들, 5·18 이후 세대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까? 시와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농성장 어머니들의 뜻에 따라 복원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진다면 당사자주의에 대한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우려처럼 5·18의 기억이 다시 지역과 피해당사자의 틀에 갇힐 수도 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화 관련 기념시설에서도 보존과 활용은 대부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과제일 수 있다. 따라서 타협과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보존과 활용의 적절한 조화가 피해당사자와 정부와 전문가 사이의 조정과 합의의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폭력 및 민주화 관련 기억공간의 조성 과정은 당사자와 비당사자, 세대를 넘어 함께 공감하는 장 場이 되어야 한다.

대책위는 “5월을 기억하고 계승해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옛 전남도청 원형을 복원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옛 전남도청을 80년 5월 당시 그대로 복원,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대책위 2017,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역사탐방」 자료집 12쪽)고 말하며 다음 세대로의 전승이라는 복원과 보존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복원과 보존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접근하기 힘든 신성한 기념비일 수 있다. 옛 전남도청과 5개의 항쟁 관련 건물을 80년 항쟁 당시로 복원한다고 해서 5·18, 오월 정신이 영원히 기억되고 전승되는 것은 아니다. 대책위와 당사자들의 바람처럼 도청의 복원이 5·18의 기억의 계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해마다 오월이면 잊지 말자고 각오하고 결의를 다지지만, 대부분의 광주시민은 일상 속에서 5·18을 잊고 살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5·18은 기억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는 역사가 되고 있다. 기념사업을 통해 5·18과 관련된 기념비들과 아카이브와 전시공간들을 만들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진, 영상, 기록물들은 과거의 흔적이지 기억 그 자체가 아니다. 관람객이 관련 지식과 정보와 상징을 만지고 느끼고 해석하기 전에는 과거의 흔적은 그저 유물일 뿐이다. 따라서 항쟁 유적의 보존과 기념만큼 중요한 것은 기억하기, 기억작업 memory work이다. 은우근(2007)의 주장처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감수한 당사자는 존중받아야 하며 기념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기념사업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 일반, 덧붙이자면 다음 세대이다.

하지만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에서 나타나는 소통의 부재는 기억의 전승을 어렵게 하고 있다. 5·18 기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당사자 중심주의는 기념사업의 논의와 집행 과정에서 배타성을 발휘하여 의도치 않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배제해 기념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5·18 기념재단, 2008 : 339).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법의 규정 내에 있는 당사자 중심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하면 그들이 바라는 기억의 전승, 5·18의 전국화 및 세계화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옛 전남도청과 5개 보존 건물의 복원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억하기의 주체, 기념의 당사자로서 다음 세대를 또 다른 당사자로 존중하고 비당사자들과 수평적으로 접촉하고 소통해야 한다.

문부식(2002)은 특별법 제정, 보상, 기념사업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통해 광주항쟁에 대한 기억이 국가의 '공식적 기억'이 되는 순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순결한 정신’이나 이념만이 강조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은 ‘광주’의 기억 밖으로 쫓겨나 버리지 않겠는가?”(274)라고 질문한다. 공식화 과정을 통해 수의 다양한 기억은 억제되고 시간은 그 흐름을 멈추고 역사가 된다. 기억이 역사가 될 때 분명히 공식 교육의 측면에서 이바지할 수는 있겠지만 5·18의 부단한 현재화와 기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80년 당시'로 복원이 항쟁의 시간을 고정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월 운동을 역사화 시키고 박제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항쟁 당시로의 옛 전남도청의 복원이 5·18을 먼 옛날의 이야기로 만들면서 다음 세대가 접촉하고 상상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가폭력 및 민주화 관련 역사적 현장의 보존, 사실의 기록과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장과 기억공간이 동시대의 사람들의 삶과 질문과 상상과 연결되는 것, 즉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부단한 현재화와 재창조이다.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도했던 성역화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기억공간을 기억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질문의 공간, 성찰의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이다. 이는 옛 전남도청 복원과 기념공간 조성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인권기념관을 포함한 다양한 민주화 역사시설의 공통 과제이다. 민주주의와 인간과 폭력에 대한 질문과 성찰의 공간으로 기억공간을 조성하는 것, 옛 전남도청을 다시 짓는 것은 당사자들의 몫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5·18 기념재단. 200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5·18 보존 건물 활용방안-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5·18 보존 공간 기념공간화사업 종합기본계획」.

광주혁신시민대토론회추진위원회. 2017. <광주혁신시민대토론회> 자료집.

김욱. 2015. 『아주 낮은 상식』. 개마고원.

김정한. 2012. “절대 공동체, 반(反) 정치의 신화.” 『사회과학연구』 20(2).104~127쪽.

문부식. 2002. “‘광주’ 20년 후 - 역사의 기억과 인간의 기억: 끼엔, 나디아, 그리고 윤상원을 위하여.” 『당대비평』 특별호. 266-321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연구용역」.

사토 유키에. 2018. “집합적 기억과 공간, 그리고 도래하는 ‘당사자’.” 『문학들』 54.24~45쪽.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1.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시범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13.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용역 중간보고서」.

옛 전남도청 보존 범시도민대책위. 2017.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역사탐방」 자료집.

은우근. 2007. “5·18 기념사업에 대한 하나의 반성.”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5·18 기념재단.

정근식. 1997. “민주화와 5월 운동, 집단적 망탈리테의 변화.” 『광주민중항쟁과 5월 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정호기. 2002. “5월 운동과 5·18 기념사업 그리고 기념공동체.” 『기억과 전망』 제1호. 180~195쪽.

조르조 아감벤. 2008. 『남겨진 시간-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강의』. 코나투스.

Young, E. James. 1993. *The Texture of Memory : Holocaust Memorials and Mea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기억작업(memory work)으로서 민주화 관련 기념시설 조성의 의미와 과제: 옛 전남도청 복원 논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9년 11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